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출범...협력사 130곳 애로사항 조사



2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지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출범식에서 지역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협동조합,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포럼은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개발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협력사 불만 1위는 '납품 단가'

45.4% "납품 단가 선정시 인건비 등 반영해야" 대기업 유치·상생 인식 개선 등 정부 대책 필요

"납품단가는 묶인 채 인건비와 원자재 값만 올라가니, 협력업체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여건으로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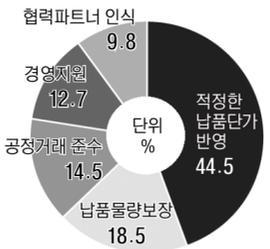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내놓은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 애로 및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30개사를 조사한 결과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꼽은 업체가 77개사(44.5%)로 가장 많았다.

이러 납품물량 보장 32개사(18.5%), 공정거래 준수 25개사(14.5%), 경영지원 22개사(12.7%), 협력파트너 인식 17개사(9.8%) 순이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76개사(58.5%)가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부적절하다고 답한 업체도 54개사(41.6%)에 달했다.

납품단가 산정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이 45.4%로 가장 많았다.

또 재료비 변동(29.2%),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비(13.1%),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비(7.7%), 운송보관비(2.3) 등도 꼽았다. 원사업자인 대기업

■ 중기, 대기업에 바란다 (복수응답)



※ 자료 : 중기중앙회광주전남본부

과의 거래·동반성장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1개사(54.6%)였다. '좋다'고 응답한 업체와 '나쁘다'라고 답한 업체는 각각 31개사(23.8%), 28개사(21.6%)로 비슷했다.

나빠진 원인으로 납품물량 감소가 50%로 가장 많았고 낮은 납품단가, 경쟁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 납품대금 지연 등의 순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신규 대기업 유치'와 '상생분위기

인식개선'이 각각 45개사(25.6%), 42개사(2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33개사(18.8%), 공정거래제도 강화 29개사(16.5%), 대기업 해외 이전 방지 21개사(11.9%), 모니터링 실태조사 6개사(3.4%) 순으로 조사됐다.

자사의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78개사(60%)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8개사(29.2%)는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좋다'고 답한 업체는 14개사(10.8%)에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날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지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출범식에서 발표됐다.

포럼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포럼 위원에는 중소기업 업체 26곳·9개 협동조합·대기업 3곳과 대학·언론·지자체·경제단체·정부지원기관 등이 참여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포럼 특별강연에서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며 "기업과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공동체 구축을 위한 근본기초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동룡기자xian@kwangju.co.kr

정부 "亞문화중심도시는 국책사업"

박혜자 의원 질의서에 답변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여 전당 인력 수요 늘면 추가지원

박근혜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또 향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정에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검토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21일 지난 9일 보낸 대정부 서면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인

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정부는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문화콘텐츠 창작 등 '창조경제'에 기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는 "6월25일 대통령 발언 이후 SNS 상에서는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은 '문화전당의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관련 및 운영계획'을 소개한다. 참석자들은 '문화전당과 문화콘텐츠 산업 연계방안'을 놓고 자유토론한다.

대책 및 국본연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인력 수요를 50명만 편성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로 인력확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신설의 경우에도 왜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불필요하게 인력을 포함할 전방적인 정부인력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문화전당이 본래 목적에 부합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적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검토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화전당 지역콘텐츠산업 연계 방안 토론회

내일 문화정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9월4일 개관)을 운영하는 정부기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문화·관광산업 분야 전문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전당과 지역콘텐츠산업 연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3시 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장동원)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산업 연계방안'을 놓고 자유토론한다.

문화전당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다. 현 마워위원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행사에서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은 '문화전당의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관련 및 운영계획'을 소개한다. 참석자들은 '문화전당과 문화콘텐츠 산업 연계방안'을 놓고 자유토론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안 통과 최선"

김현용 법무장관 밝혀

김현용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에 나선 2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9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날 수원과 안전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대상지에 포함된 수원과 안산이 첫 방문지가 됐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범죄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첫 현장 방문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 팔달구에서는 '오원춘 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경필에서 김 장관은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억원

한전 납품비리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비리 의혹을 정부에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무려 11억원이 넘는 보상을 받게 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됐다. 한전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납품대금을 지급했고, 해당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당하게 받아 낸 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

A씨는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2월 범법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263억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대상 가액인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11억 6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선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보상금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이 뛰어나고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4년 8.1제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자(영광군 추천양식에 의한, 영광군공민회)-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향우 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의 한함)
 -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능보유자나 선행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 ~ 7.31(금)
- 최종 확정 안내: 2015년 8월경 발표(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9월) 예정
재광영광군향우 자녀-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 행사 (12월) 예정

IV. 신청 방법

- 우편·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예천빌딩 7층)
-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010-8667-6143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